

산업정책 www.kcca.or.kr

- 10년도 중소기업청 예산안
- 국세청, 무료 세무서비스 제공
- 산업보안기술개발 사업 30억원 지원
- 2010년 지방세납부 개편내용
- 조달청, 신용평가 수수료 대폭 인하



(본예산 대비 23.7% 감소, 금융제외시 18.5% 증가)

10년도 중소기업청 예산안

□ 내년도 중소기업지원을 위한 정부예산안이 금년보다 △23.7% 감소된 5조 9,752억원으로 편성되었으나

- 경제위기 극복과정에서 한시적으로 대폭 증가되었던 신용보증 및 정책자금을 제외한 실질적인 중소기업지원 예산은 '09본예산 대비 18.5% 증가한 2조 4,906억원으로 편성된 것으로 나타났다.

는 불가피한 실정이다.

* 중기대출액(조원) :

('09.1) 2.6 → (2) 3.4 → (5) 3.2 → (8) 3.6

* 중기 자금조달사정(실적) :

('09.1) 56.7 → (4) 72.8 → (6) 77.9 → (8) 78.6

- 다만, 중소기업 금융지원예산은 줄더라도 중소기업이 실제 지원받는 정책금융 규모는 예년수준을 크게 벗어나지 않도록, 금년내 여유재원을 활용하는 등 보완장치를 강구하였다.

□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중소기업의 긴급 유동성 지원을 위해 확대되었던 신용보증지원 규모는 66.1조원으로 금년(67.4조원)보다 1.3조원 감소되었으나,

(억원)

구 분	'09예산		'10예산안 (B)	총 감	
	본예산(A)	추경		(B-A)	%
총지출(C+D)* (금융지원 제외시)	78,309 (21,023)	119,305 (24,018)	59,752 (24,906)	△18,557 (3,883)	△23.7 (18.5)
• 예 산(C) (금융지원 제외시)	26,639 (11,907)	48,911 (12,179)	16,805 (13,313)	△9,834 (1,405)	△36.9 (11.8)
• 중진기금(D) (정책자금)	51,671 (42,555)	70,394 (58,555)	42,948 (31,355)	△8,723 (△11,200)	△16.9 (△26.3)

□ 신용보증 및 정책자금이 감액된 것은 최근 금융시장 정상화에 따른 시중 유동성 회복을 반영한 것으로 이해된다.

- 최근 경기회복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면서 중기대출액이 증가하는 등 시중의 중소기업 자금사정도 다소 개선되고 있어, '09추경대비 정부예산의 축소

이는 금융위기 이전인 '07년보다 대폭 확대된 규모이며,

- 특히, 소상공인 등 영세자영업자 지원을 위한 지역신용의 보증지원 규모는 확대('09년 11.9조원 → '10년 12.6조원)키로 하였음.

* 신용보증규모(잔액기준, 조원) : ('07) 44.4 → ('08) 49 → ('09) 67.4 → ('10) 66.1

• '09년 추경(1.6조원)에 반영된 신용보증기관의 사고율이 당초 예상보다 낮아, 크게 확충된 현재의 기본재산으로도 '10년 보증운용 여력이 충분

※ 신용보증 출연 : ('07) 2,700억원 →('09당초) 1.1조원 →('09추경) 2.7조원 →('10) 0원

※ 기본재산 :

신보 ('08) 2.6조원 →('09말전망) 4.2조원 (61.5% ↑)

기보 ('08) 1.7조원 →('09말전망) 2.3조원 (35.3% ↑)

※ 사 고 율 :

신보 ('08) 5.0% → ('09당초전망) 9.6% → ('09.8 실적) 4.6%

기보 ('08) 6.1% → ('09당초전망) 11.0% → ('09.8실적) 4.7%

□ 정책자금 규모는 3.1조원으로 금년(5.8조원)보다 2.7조원 감소되었으나, 이는 금융위기에 대응하여 대폭 확대된 운전자금(경영안정자금, 소상공인자금)이 축소된데 기인하며

※ 경영안정자금 : ('08) 3,113억원 → ('09) 15,000억원 → ('10) 2,500억원

※ 소상공인자금 : ('08) 2,400억원 → ('09) 11,000억원 → ('10) 3,000억원

• IMF 금융위기 당시에도 정책자금이 확대되었으나, 금융위기극복이후에는 그전 수준으로 반영된 사례가 있고

※ 정책자금 : ('97) 1.7조원 → ('98) 2.2조원 → ('99) 3.0조원 → ('00) 2.2조원

〈최근 5년간 중소기업 정책자금 규모〉

구 분	'04	'05	'06	'07	'08	평 균
정책자금	3.4	3.6	3.2	3.1	3.2	3.3

• 내년도 정책자금은 운전자금을 대폭 축소한 반

면, 중소기업 창업 및 개발기술사업화 등 경쟁력 강화를 위한 자금은 확대

※ 창업자금 : ('08) 6,400억원 → ('09당초) 1.0조원 → ('09추경) 1.1조원 → ('10) 1.1조원

※ 개발기술사업화 : ('08) 1,200억원 → ('09당초) 1,580억원 → ('09추경) 1,880억원 → ('10) 1,580억원

□ 그밖에 '10년도 증액된 중소기업 지원 일반예산의 주요 특징은 다음과 같다.

① 먼저, 기업형 수퍼마켓(SSM) 등에 대응한 서민생활안정을 위해 전년대비 9.1%(214억원) 증액된 2,581억원으로 편성하였다.

• 전통시장 시설현대화(1,752 → 1,597억원) 지원 사업은 지방자치단체의 자율편성에 따라 일부 축소 되었으나, 이는 실행행 제고를 위한 수요 단계별 예산요구에 기인하며

* 「재래시장 및 상점가 시설현대화사업 운영 지침」 11조 제 9항 : 자금의 수요단계별 예산 분할편성('09.2월 개정)

• 지역문화와 주변 관광자원을 연계한 특성화전통시장 육성 등 시장경영혁신(287→365억원), 소상공인 교육, 공동마케팅, 케이블 TV 홍보 등을 통한 소상공인 경쟁력 제고사업(193 → 311억원)을 증액 반영하고

- 특히, SSM에 대응하여 소매점포가 가격, 위생, 서비스 등에서 경쟁우위를 가진 스마트샵 육성 사업(1,110억원)을 신규로 반영하였다.

※ 스마트샵 표준모델 개발 및 컨설팅 110억원, 스마트샵 육성자금 1,000억원

- ② 미래성장동력 발굴 육성 등 중소기업의 기술 경쟁력 확보를 위해 14.4%(707억원) 증액된 5,607억원의 R&D 예산을 편성하였다.

- 중소기업의 현장기술혁신 역량강화를 위한 기술혁신개발(2,620→2,797억원), 개발제품의 구매까지 연계하는 구매조건부 기술개발 등 상용화 기술개발(650→750억원)과

- 대학·연구소와의 협력을 통해 중소기업의 혁신능력을 배양하는 산학연 공동기술개발(977→1,097억원), 첨단연구장비 활용(76→326억원)을 확대하였고

- 중소기업의 에너지 저감 공정개발 등 제조공정 녹색화를 위한 제조현장 녹색화 기술개발(247→327억원) 등을 확대 편성하였다.

- ③ 창업촉진을 통한 일자리 창출 위해 27.2%(559억원) 증액된 2,613억원의 창업지원 예산을 편성하였다.

- 체계적인 창업 보육서비스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중소기업 창업보육센터를 확충(286→324억원)하고

※ 창업보육센터 3개 신축, 15개 확장(현재 282개)

- 비수도권 제조업의 창업촉진을 위한 창업기업 투자보조금(600→1,000억원)을 대폭 확대하는 한편

- 창의적인 아이디어가 신규 창업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아이디어 상업화 지원(250→300억원) 및 예비기술창업자 육성사업(460→494억원)을 확대 편성하였다.

- ④ 앞서 언급한 대로 글로벌 위기과정에서 일시 증액된 금융예산은 위기이전 수준으로 정상화하였다.

- 경기회복 전망을 감안하여 정책자금 규모는 3.1조원으로 예년 수준을 유지하고

※ 정책자금규모 : (5년평균) 3.2조원 → ('09추경) 5.9조원 → ('10) 3.1조원

- 금융시장 안정화에 따른 '10년 보증공급 규모 역시 단계적으로 정상화 할 예정이다.

※ 보증공급 규모 : ('09계획) 67.4조원 → ('10안) 66.1조원

□ 중소기업청은 이번 예산안이 국회에서 심의·확정 되는대로 '10년도 사업계획에 이를 반영하여 각종 중소기업 지원정책을 차질없이 수행하도록 철저히 준비해 나갈 계획이다.

국세청, 무료 세무서비스 제공

국세청은 을 5월 출범한 영세납세자지원단을 통해 8월 말까지 4개월간 1만683명에게 무료 세무서비스를 제공했다고 최근 밝혔다. 영세납세자지원단은 경제적 능력이 부족해 세무대리인을 선임하지 못하는 영세납세자에게 무료 세무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지난 5월 전국 107개 세무서에 설치됐다. 예상고지세액 또는 청구세액이 1천만원 미만의 개인 영세납세자가 지원 대상이다. 영세납세자지원단은 이들에게 과세자료처리, 세무조사, 불복청구, 고충민원 및 체납처분 등 세금문제 전반에 대해 법령자문·상담의 서비스를 제공한다. 지난 8월 말까지 제공한 1만683건의 서비스 중에는 종합소득세 및 부가가치세 신고지원이 85.7%(9천161건)로 가장 많았다. 고충민원 및 불복청구 6.9%(736건), 체납처분 3.2%(345건), 과세자료처리 1.9%(199건) 등이 뒤를 이었다. 영세납세자지원단 서비스를 받으려면 각 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국번 없이 1577-0070), 부가가치세과, 소득세과(또는 세원관리과)에 도움을 요청하면 된다. 집이나 사무실에서 1577-0070번으로 전화를 걸면 전화 소재지 관할 세무서의 납세자보호담당관에게 자동으로 연결된다. 국세청은 영세납세자지원단 전산관리시스템을 개발해 운영상황을 상시 점검하고, 현장 중심의 홍보를 실시, 더 많은 영세납세자가 서비스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중기청 '보안 인프라 확충 지원'을 위해

산업보안기술개발 사업 30억원 지원

□ 중소기업청(청장 홍석우)은 중소기업의 핵심 기술 유출 방지를 위한 보안기술 및 관련 H/W, S/W 등의 개발지원을 위한 '09년도 ?산업보안기술 개발사업에 33개 과제 30억원을 지원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 본 사업은 '07년부터 중소기업의 산업보안 인프라를 조성하고, 중소기업 현장에 적합한 맞춤형 보안기술을 개발, 널리 보급·확산시켜 중소기업의 기술개발 성과물이나 영업비밀이 유출되는 것을 사전에 방지하여 중소기업의 기술경쟁력 제고하기 위한 사업으로 '07년 37개, '08년 38개 과제 등 75개 과제에 60억원을 지원한 바 있습니다.

• 특히, 금년에는 97개 신청과제 중 생체인식을 통한 출입통제시스템 같은 바이오기술(BT)과 DDOS 공격 해킹 탐지 복구 시스템 같은 정보기술(IT) 등 전문핵심기술 및 마케팅 능력을 보유하여 상용화가 가능한 33개 과제를 선정, 업체당 평균 87백만원을 지원하게 된다.

□ 중소기업청은 동 사업이 단순한 기술개발 지원에 그치지 않고, 개발된 기술이 중소기업에 널리 보급·확산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 중소기업 보안시스템구축지원사업과 연계하

여 중소기업의 기술유출 방지를 위한 효율적인 지원 체계가 마련되도록 지원할 방침이다.

〈붙임 1〉 중소기업 산업보안기술 개발 지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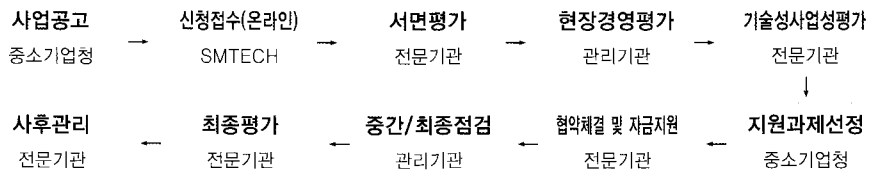
□ 사업목적

- 중소기업의 핵심기술유출 방지를 위한 신기술(제품) 개발을 지원하여 중소기업 보안 인프라 조성

□ 지원내용('09년 예산 : 30억원)

- 지원대상
 - 보안장비 · 솔루션 개발능력과 원천기술을 보유한 중소기업
- 지원조건
 - 개발기간 : 1년 이내
 - 지원범위 : 총 개발소요비용의 75% 이내, 1억원 한도
 - ※ 개발성공시 정부출연금의 20%를 기술료로 회수

□ 추진절차



□ 지원실적('07~)

- '07년도에 지원시작, '08년까지 총 75개 과제에 60억원을 지원
 - '07년도 37개 과제(30억), '08년도 38개 과제(30억)

2010년 지방세납부 개편내용

지방세납부 “언제 어느 곳에서도 자유롭게”

대전에 사는 A씨. 지방세를 납부하고 납세증명서를 발급받으려고 자치센터를 방문했으나 영수필 통지서가 금융기관에서 일주일 이상 걸려 발급받지 못하고 되돌아갔다. 충북에 사는 B씨는 자동차세를 신용카드로 납부하려고 했으나, 일부 소수 신용카드만 가능해 납부하지 못했다. 앞으로 이러한 지방세 납부 불편사항이 내년부터는 사라진다. 행정안전부가 지방세 납부제도를 내년부터 대폭 개편하기 때문이다. 우선 행안부는 2010년부터 모든 OCR 세금고지서를 없애고, 온라인으로 지방세를 납부할 수 있도록 개선했다. 이에 따라 납세자들은 통장이나 직불·신용카드를 가지고 가까운 은행이나 ATM기기로 간단하게 자신의 세금을 확인, 납부할 수 있게 됐다. 지방세 안내는 이메일이나 SMS(문자서비스) 또는 납부안내문을 통해서 공지된다. 또한 납세자들은 납부 즉시 전국 어디서든지 인터넷이나 전산망을 통해 지방세 납부사실을 조회, 확인할 수 있고, 별도의 영수증을 제출하지 않고서도 부동산 등기나 특허등록, 자동차 등록이 가능해진다. 아울러 5년간 영수증을 보관해야 하는 불편과 분실로 인해 발생하는 손해도 더 이상 보지 않아도 된다. 그동안 납부절차가 지나치게 까다롭고 사용할 수 있는 신용카드도 제한되어 지방세 카드 납부가 활성화되지 못했으나, 내년부터는 달라질 것으로 보인다. 인터넷에 접속, 공인인증서만 입력하면 모든 과세정보가 자동으로 검

색되고, 선택해서 납부하기만 하면 되기 때문에 납세건수가 몇 건이어도 1분 이내 처리가 가능해진다. 이와 함께 국내에서 사용되고 있는 모든 카드로 납부가 가능해지고, 일부 지자체가 부담하거나 납세자가 부담하던 수수료도 없어진다. 은행 ATM에서도 신용카드를 통해 간단히 지방세를 납부 할 수도 있다. 자동이체 등을 통한 지방세 납부서비스도 개선된다. 기존에는 각 지자체별로 자동이체가 가능한 은행이 1~2곳으로 제한돼 있었으나, 내년부터는 모든 지자체의 모든 은행으로 확대된다. 또한 타지역의 경우 우체국, 농협에서만 지방세를 납부할 수 있었으나, 앞으로는 지역·금융기관 구분없이 납부할 수 있게 된다. 법인의 경우 현재 주민세와 사업소세를 각 지점마다 개별적으로 자치단체에 신고, 납부했던 것을 2010년도부터는 본점에서 일괄 처리할 수 있게 해 납부지연으로 인한 불필요한 가산세 부담에서 완전히 벗어날 수 있게 된다. 행안부는 이러한 제도개선을 위해 우선 ‘표준수납대행계약제’를 실시해 230개 지자체가 모든 금융기관과 표준계약에 의해 일괄 계약해 수납업무를 대행토록 했다. 이렇게 되면 납세자는 거주지역, 거래은행, 신용카드에 관계없이 모든 지방세를 은행 ATM이나 인터넷을 통해 수수료 없이 간편하게 납부할 수 있게 된다. 이와 함께 통합수납처리센터를 설치, 전국의 지자체와 금융기관을 온라인으로 연결해 전국 어디에서 어떤 은행, 어떤 카드를 이용하더라도 통합수납이 가능하도록 했다.

조달청, 신용평가 수수료 대폭 인하

조달청은 글로벌 금융위기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의 비용부담 완화를 위해 5개 신용정보회사와 함께 공공기관 제출용 기업신용평가에 대해 평가수수료를 대폭 인하하기로 했다. 조달청과 5개 신용정보회사는 공공기관 입찰 등에 참여하는 기업의 자산규모에 따라 평가수수료를 7~28% 상당 대폭 인하한다고 최근 밝혔다. 조달청 등 공공 조달시장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신용정보회사의 신용평가등급을 제출해야 하므로, 업체별로 약 20만원에서 40만원에 상당하는 수수료를 매년 지출해 영세업체에게 많은 부담으로 작용했다. 정부는 적격심사, 다수공급자제

약 적격성 평가, PQ심사 등 각종 평가에서 업체의 경영상태를 확인하기 위해 신용정보회사의 신용평가정보 제출을 의무화하고 있다. 이번 수수료 인하 결정은 신용정보회사의 입장에서는 30여만원에 이르는 원가를 감안할 때 상당히 어려운 결정이었으나, 중소기업의 공공조달시장에 참가하는 비용을 덜어줘 경제위기를 극복하도록 도와주자는데 조달청과 뜻을 같이 했다. 이에 따라 작년 기준으로 약 5억4천5백만원의 수수료 절감효과가 공공조달에 참여하는 기업 전체에 돌아갈 것으로 기대된다. 조달청 관계자는 올해에 네트워크론 확대, 보증·대출제도 도입 등 조달업체에 대한 금융지원 기반을 강화했으며, 이번 수수료 인하도 중소기업에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아울러 조달청은 앞으로도 중소기업이 부담을 느끼지 않고 조달시장에 참여할 수 있도록 다각적인 지원방안을 발굴해 시행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